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9. 20.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14:00~18:2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3년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65호 『(주)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과징금 한도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회사관계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실제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10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보임.
- (위원) 저도 외감법상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회사에 최종적으로 부과한 과징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위원장)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 관계자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모든 감경사유 적용 후 최종 과징금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대표이사와 前담당임원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95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보고안전 제37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4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전 제38호 『(주)셀트리온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4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전 제39호 『(주)셀트리온제약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4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이상 3개 안전을 일괄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보고안전 제40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술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41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법이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취지가 무엇인지? 그것은
돈을 벌려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유인을 신속
하게 제거하자는 것이 이 법의 개정 취지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기관에서 수행하는 임무나 과제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그 뜻을 받아서
이 법을 통과시킨 기본 출발점(starting point)이 어디인가를
저희가 분명히 짚어야 될 필요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가급
적 신속한 과징금의 부과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불공정거래 절차가 지금까지는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의 완결성이나 증거의 확보나 검증이 미
비하다면 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저희가 보완하는 것이 과
제인 것으로 보임.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법을 준수하
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인데 아까 말씀주시기를 현실적으
로는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한 다음에 2차 조사 후 부과
한다고 하고, 예외가 1년이 지난 때까지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다 표현 자체는 신속한 과징금 부과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그것이 법을 개정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과 협의할 때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함. 아울러서 저희가 그간에 불공정거래 안전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인적·물적 자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과징금이라는 최종적인 행정처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절차적으로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과거에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프로세스(process)에 따라서 ‘이 사건은 과연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해야 되는지?’ 라고 할 정도로 투자금액이 작거나 부당이득금액이 아주 소액인 금액들이 있었음. 한국거래소에서 어떤 기준으로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거나 시장에 영향이 큰 사건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준이 예를 들어 10년 전에 부당이득 1,000만 원 미만이면 다 보낸다고 하지만, 중요도에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보니깐 어찌 보면 신속한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큰 과제로 사실 남아있는데 차제에 저희가 이 프로세스(process)에 들어오는 사건에 대한 체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 부당이득 1,000만 원 짜리 사건이든 사회적으로 정말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든 이렇게 다 똑같이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한 번 더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아무리 사람을 많이 투입해도 처리시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상당히 어려

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이나 중요도에 따른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 아울러 Fast Track에 대한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제때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Fast Track이 맞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음. 그래서 Fast Track에 보내는 사건은 정말 신속하게 바로 수사력이 집중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Fast Track으로 가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단계로 집중심의제 같은 것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향후에는 과징금 부과를 다 전제로 조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완결성을 갖춘 단계에서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든 신속한 제재에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다음으로는 향후 과징금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제재를 염두에 두고 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의 정도나 증거의 확보, 심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음. 결국은 금융위 자조단이 가지고 있는 강제조사권이 금감원과의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증거를 얼마나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음. 증거의 확보, 증거의 해석, 증거의 검증 단계에서 금감원과 금융위 간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잘 협력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제로 넣어주셔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서 조사·공시·감리가 어찌 보면 금감원 단계도 그렇고 진행절차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칸막이가 있는 느낌임.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서 같은 기제로 발생한 사건인데 그간에는 그것을 조각조각내서 처리가 되어온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것이

각각 다른 형태의 부서에서 동시에 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각각의 부서의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음. 왜냐하면 모두 다 기다리다가 오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부서 업무를 처리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시장 질서교란행위는 확정되면 바로 공개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가중된 책임을 부담하는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 중이니까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교란행위자는 바로바로 공개가 되는데 형사판결 확정된 사람은 확정되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없고 확정된 뒤에도 공개가 안 되고, 이것은 체계에도 맞지 않고 불합리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른 기관과 협의하실 때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상당히 광범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음. 제시된 개선방안을 쭉 살펴보니 주로 불공정거래 적발 및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음. 그래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강화 방안, 예를 들면 교육강화라든지 홍보강화라든지, 또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전예방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그다음에 조기적발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제가 가끔 휴대폰으로 종목 추천한다는 문자를 받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또 신고하려면 어

디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함. 만약 이것이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필요한 것이라면 개인도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산동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을 함. 다만,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위원)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첫 페이지를 봤을 때 금융위, 법무부, 검찰청, 금감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투협이 있음. 그런데 성격이 다른 기관이 하나 있어서, 금투협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계속 읽었음.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 역할이 결코 크지 않음. 권역별 표준규정은 상장회사나 코스닥회사나 똑같고, 금투협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비상장 주식들 거래하는 것, K-OTC에서 조기 경고하는 이것 하나 있는데, 이것이 궁금했음. 주관을 하는 기관의 하나로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상장 주식 시장이 점점 커지고 혁신금융으로 이미 두 기업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상장거래의 K-OTC, 금투협이 하고 있는 것에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그널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됐음. 지금은 금투협에서 하고 있는 K-OTC가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훨씬 수월한 구조인데 이쪽에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일종의 문턱이 점점 올라가서 한편으로는 혁신금융으로 해서 다른 형태로 비상장주식들이 거래될 수 있게

장려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금투협이 K-OTC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면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증권사들의 문턱만 계속 올리는 느낌임. 결국 처음 제가 드린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료 첫 페이지부터 금투협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 (보고자) 그 부분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비상조사·심리기관협의회 논의 때도 있었고, 이 부분은 K-OTC 관련해 없던 것이 새로 체계를 갖추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국가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금투협회 차원에서도 불공정거래 대응 관련해서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음. 그런 차원에서 불공정 대응 체계 외연을 좀 더 넓히고 협회의 자율적인 기능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임. 하여튼 내용은 그 정도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 이것이 불공정거래를 잡아야 되는 목적과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어떤 식으로 금투협의 기능이라든지 이외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불공정 혐의의 제도 취지와 불공정거래를 잡는 목적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전반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주신 사항의 대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유념해서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도 같이 고민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검찰이라든지, 법무부와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과징금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도취지 자체가 형사벌이 늦어지는 목적이 있어서 신속한 도입인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처음에 이 정부(안)을 합의할 때부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부처 안에서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하자고 합의하고 시작한 부분임. 국회 논의과정에서 틀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 합의과정에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몇 년 후 내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것이 검찰수사 갔다 오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봐서 금융위, 금감원 차원에서 검찰까지 안 가도 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필요한 협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두 번째로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적인데 효과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라덕연 사태 같은 지능범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적출하는 사유를 피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혐의 적출 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이 적출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늘 있고 그것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위에서는 그런 숙제를 늘 갖고 있는 것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의 모든 정도의 모든 깊이의 범죄행위를 다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사건의 계기도 있고 했으니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갖추어진 인프라 하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시스템개선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금융위도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이 한국거래소에서 걸려져오고 저희 쪽으로 통보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잡아내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면서 나갈 예정임.

Fast Track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기는 한데 고민은 해 보겠음.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있어서 정말 신속히 해야 하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Fast Track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음. 이 부분이 모든 사건에서 그런 취지대로 운영됐는지, 신속한 통보도 좋지만 그전에 금융위, 금감원 단에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보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음. 이것도 기회가 되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그리고 저희 발표내용에도 있지만 금융위, 금감원이 협업해서 강제조사권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중국적인 처벌을 하게 될 테니까 최대한 증거확보라든지,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기관 통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마 덜 꼼꼼한 측면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음. 그렇게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다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겠음. 그리고 불공정조사 할 때 공시·감리 칸막이 있는 부분도 여러 차례 금감원과 얘기해서 금감원이 실제로 관련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고 그것을 무조건 허무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것은 어찌되었든 같이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최근에 펀드사태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관련된 부서들이 협업하면서 심의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금감원 더해서 금융위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잘 운영하도록 신경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제재 확정자의 정보공개 하는 부분은 해외에서도 은근히 활용하는 기관들도 꽤 있는 것 같고 필

요성도 있음. 실제로 재범율도 높고, 또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이 버젓이 카페 운영하고 있는 등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협의를 해봤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현재까지는 탈세와 성범죄자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여서 그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갖게 되었지만 단순히 저희 의지만으로 되기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같이 고민을 해 볼 예정임. 해외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해외에서도 금융당국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제도를 이미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금융당국에서 형사처벌 간 것까지도 공개하는지는 약간 나라마다 차이가 있거나 아닌 경우도 있는데,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기는 함. 그런 기타 등등으로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음. 그리고 사전예방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개월 간 논의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생각해 보자고 해서 나름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반영하고 싶은 내용도 더 많았는데 그것을 모두 다 반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인 적법 절차를 조금이라도 강화하는 것을 아예 방안에 조금 더 넣어보고자 하는 생각,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아예 사전예방, 교육이 됐든 홍보가 됐든 이런 불공정거래 예방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분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시장

감시, 심리, 조사에 집중(focus) 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음. 그리고 자산동결은 필요성을 공감해서 추진할 예정임. 말씀하셨듯이 비상조사·심리기관협의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꼼꼼히 검사할 부분이 많고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사실은 이 방향을 발표했고 실제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들은 아마 많이 검토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함.

- (위원장) 대책 만든다고 수고하셨음. 내일 발표 이후에 실제 대책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 부분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람. 제41호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66호 『(주)와이바이오로직스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희 회사는 2018년 10월에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저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었음. 저희가 그 당시에 자본시장법령을 면밀히 따지고 했어야 했는데 처음 투자를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투자전문가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주로 받는 회사임. 바이오텍 회사이고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나중에 저희가 2년 전에 코스닥상장 심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고 그때 저희가 범위만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 그래서 인지한 즉시 저희가 자진신고를 했음. 저는 국가출연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2015년도에 연구원 창업을 하면서 주로 바이오신약개발을 하는 회사임. 그래서 주로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이고, 그러한 투자는 투자전문가들이,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신기술금융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저희가 회사 소개를 하고 투자 유치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 당시에 공모가 아니고 소수한테 투자를 받는 사모로 알고 투자를 진행했었음. 어쨌든 저희가 뜻하지 않게,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고 법을 위반한 것도 잘 인지하고 있음. 다만, 저희 회사는 투자 받은 금액을 전부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회사임. 특히 신약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투자금 한 8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사용해서 결손금이 상당히 많은 상태임. 그래서 저희한테 부과된 과징금이 저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감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청원을 드리는 바임.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유상증자가 3회 있었음.

▶ (진술인) 맞음.

- (위원) 2018년 9월7일, 2018년 10월12일, 2018년 10월31일. 시기적으로 약간 붙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유상증자가 진행되게 되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 ▶ (진술인) 당시에는 저희가 이 3건을 따로따로 계획하고 투자 받은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투자가 있었던 2018년 당시에는 비상장 바이오투자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한 다음에 다른 벤처캐피탈 (VC)들도 와서 “앞으로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게 될 테니 투자를 더 받아라” 하는 요청이 많았음. 그래서 그런 요청에 의해서 투자를 더 받게 된 상황이었음. 저희가 처음부터 이 3건을 별도로 이 시기에 받아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받은 것은 아니었음.

- (위원) 그러니까 첫 투자를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우리 투자도 받는 것이 어떨겠느냐?”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건이 투자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3건을 동시에 추진했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런 사실은 없음. 처음에 첫 번째 투자를 받고, 저희가 계획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전부 요청에 의한 투자를 받게 된 것임.

- (위원) 이해했음. 발행가격도 다 똑같은데, 투자를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발행가격을 다 같게 하게 된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회사의 가치가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하게 받았으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3건을 받은 것은 아님.
- (위원) 2차, 3차 모두 벤처캐피탈(VC)로부터만 투자를 받은 것인지?
 - ▶ (진술인) 맞음. 저희 회사에서는 벤처캐피탈(VC)만 접촉(contact)을 하고 그 무한책임투자자(GP)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탈(VC)들에게만 기업설명회(IR)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때는 유한책임투자자(LP)가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쪽에서도 얘기해 준 적이 없었음.
- (위원) 말씀하실 때 무한책임투자자(GP)하고만 의사소통을 하고 유한책임투자자(LP)와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다는 말씀이신지?
 - ▶ (진술인) 그러함. 저희는 무한책임투자자(GP)하고만 기업설명회(IR)를 하고 무한책임투자자(GP)의 투자심사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무한책임투자자(GP)하고만 소통(communication)하고 있음.
- (위원) 그러니까 투자조합 하나는 한 투자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래서 유한책임투자자(LP)가 몇 명이거나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그러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인가에 미래에셋방지법 때문에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같은 기에 발행된 것으로 보겠다고 하고 있고, 일반 사업회사의 경우에도 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에 의해서 발행된 건이라고 보기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행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하나의 발행으로 보기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됨.

- (위원) 저는 다른 질문이 한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여기에 일반투자자가 있는데 여기에 무한책임투자자(GP)의 운용력이나 임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지?

- (보고자) 그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궁금한데, 임원들이나 운용력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도 일반투자자로 합산이 되었는지? 혹시 들어 있고 합산이 되었는지?

- (보고자) 조합 안에 있는 일반투자자의 수를 합산할 때 전문가이거나 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제외를 했음.
- (위원)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오해의 소지가 컸기 때문에 감정의 여지가 매우 많다고 생각함.
- (위원장) 본 건 (주)와이바이오로직스의 제척기한이 언제인지?
- (보고자) 10월 11일임.

(15시 55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 (위원장) 자조심의 논의와 금감원 검토의견을 존중하여 기존의 관행대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제166호 안건은 (주)와이바이오로직스가 자진신고를 한 점, 업계의 오인이 있었던 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에 비추어 (주)와이바이오로직스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상참작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1억 6,19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67호 『OOOO(주) 등 21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희가 이미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진술 자료를 2개를 제출했음. 이미 다 제출해서 읽어보셨다고 생각하고 핵심위주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음. 일단, 본 건 진술에 앞서 조치사전통지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번 조치원인 사실의 요지를 보면 혐의대상기간이 무려 4년 반임. 그리고 배우자 및 본인명의 계좌 8개를 이용해서 21개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시세조종하였다는 취지인데, 본 건을 바라봐 주심에 있어서 일정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으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함. 혐의대상기간이 4년 5개월임. 이 부분은 4년 5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이 일반적인 매매기법으로 생각하고 장기간 지속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음.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배우자 명의를 통해서 차명거래를 하려고 했던 취지가 전혀 아님.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 거래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증권사 별로 수수료 면제나 할인혜택을 부여했었음. 그러다보니까 점점 계좌가 늘어났음. 다만,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8개 계좌를 동시에 사용해서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특정종목을 거래할 때는 1개 계좌로만 매매를 하였음. 다시 말해 일반적인 시세조종에서 나오는 패턴인 여러 개의 계좌를 동

시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수가 공모하여 시세를 견인하거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임. 조치사전통지서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가장·통정매매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도 그런 이유임. 혐의대상 주문에 대해서는 기재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마도 금감원 쪽에서는 단주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것이 뭔가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 것 같음. 기재된 바와 같이 진술인은 일반적인 매매기법으로써 한 것임. 본인 스스로 참고하기 위해서 주문을 넣은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시세를 견인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시세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음. 특히 호가관여율이 시세조종으로써 시장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의 중요지표인데 시타텔 건이라든지 다른 시세조종 건의 호가관여율에 비추어보면 아마 △△△ 진술인이 본 건과 관련해서 제출한 매매주문은 상당히 낮은 호가관여율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됨. 다른 단주매매 사례들을 분석해봤더니 다른 단주매매 시세조종 사례들은 가장매매 주문형태가 뚜렷했지만 본 건은 그런 것이 없음. 특히, 4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56,000회의 주문을 넣었다는 것이 뭔가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됐던 해당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특정기간 단위로 따졌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주문이 제출됐음. 의정부지법 사례만 보더라도 저희와 비슷한 5년의 기간 동안 530만 여회의 주문이 제출되었음. 지금 금감원에서는 고가매수주문이 56,000회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고가매수주문의 개념에 부합하는 주문인지 약간 불분명한 것 같음. 이 부분은 두 번째 발표자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말씀드린 바

와 같이 단주매매를 통해서 매매유인 효과를 거두려면 단주매매와 함께 대량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본 건은 제출된 주문의 수량상 대량의 고가매수주문이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시가관여 및 허수매수주문 마찬가지임. 현재 조치사전통지서 상에 4년 5개월 동안 시가관여주문이 4회, 허수주문이 1회 있었다는 것인데, 4년 5개월 동안에 4회, 1회가 있었다면 이것은 사실 시세조종의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써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음. 오히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진술인의 매매패턴이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함. 진술인이 두 번째 자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 실제로 시장에서는 진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시장참여자들의 단주주문이 이미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아마도 자조심에서는 진술인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예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위법행위로 나아갔다는 근거로 생각하신 것 같음. 하지만 진술인이 증권사로부터 받았던 경고는 이번에 금감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상 종목과 겹치는 것이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가 정확히 전체 대상 종목을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경고를 받았던 종목이 이번에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종목과는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증권사의 경고는 자기들 내부기준에 따라서 다소 일상적으로(routine)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위법한

시세조종이 되는 구나.’ 이렇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음. 자조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주매매를 반복하는 패턴을 통해서 혹시라도 사후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음. 저희는 저희가 제출한 매매패턴을 부인할 생각도 없고 혹여라도 그러한 매매로 인해서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도 아님. 저희는 시세조종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금감원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그래서 저희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치 선례를 자료에 기재해 놓은 것임. 오히려 시타텔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봤을 때 본 건이 더 가벌성이 낮은 사안임은 너무도 분명해보임. 이런 부분을 형평성이나 일관성 관점에서 고려해주시기 바람. 한편 자조심에서는 진술인이 주식투자에 관한 책을 썼던 전문가이니까 자신이 내는 주문이 시세조종 주문이 된다는 것을 당연히 예견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음.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진술인이 이런 부분을 자기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공표한 것인데 자신의 매매기법이 시세조종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책을 낼 이유가 절대 없을 것임. 오히려 이런 책의 발간은 자신의 매매기법이 떼떈하고 일반적인 매매기법이라는 생각 하에 저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위원) 대량 선매수 후에 단주주문을 한 것은 맞으신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그 단주주문을 낸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단주주문을 내신 것인지?

▶ (진술인) 기본적으로 매도타이밍을 재기 위해 한 것으로 시세조종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도호가 수천 주에 달하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단주매매를 한다고 해서 시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일단 제가 호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놓았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뭐하고 해서 습관적으로 한 것임.

- (위원) 조금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매수를 해 놓고, 말씀에 의하면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다음에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두 주를 매수호가를 넣었다고 말씀인지? 제 질문은 어떤 경우가 매도세이고 어떤 경우가 아니라는 것인지?

▶ (진술인) 제가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다보니까 감각적으로 알게 된 면도 있음. 시장가로 매매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매번 호가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시장가로 팔게 되면 저는 제가 샀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되는 경우도 있음. 그런 의도이지 특별하게 시세조종성 의

도는 없었음.

- (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면 단주주문을 하셨는데, 왜 하셨느냐고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상황 파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니까 시장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결국은 전량매도를 하신 날들이 있음.

▶ (진술인) 일단은 확실하게 호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놓은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저는 나름 확신을 갖고 있었음. '이 종목은 올라갈 것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올라간 적이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함. 다만, 그 과정에서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이상해서 저는 습관적으로 단주를 했는데 단주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수익을 내고 나온 것도 아니고 큰 손절을 한 적도 있고 작은 손절을 한 적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음.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기보다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우신지?

▶ (진술인) 맞음.

▶ (진술인)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제가 인플루언서의 지위가 도드라지고 제가 이런 지위를 이용할 마음이 조금

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이용하였을 텐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음. 어느 누구의 협조도 없이, 그리고 프로그램의 도움도 없이 저 혼자 손가락으로 한 주씩 사고파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기만 했음. 사면서 매수1호가에 호가를 바치는 행위도 한 적이 없음. 저의 이런 매매방법으로 인해서 시세조종이 일어난다거나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예상했다면 진짜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음.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함. 특히 만에 하나 제 행동으로 인해서 실제 매수세가 일어나서 시장질서가 교란됐다는 결과가 있다면 그 과징금 조치는 정말 책임지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음. 하지만 저는 시세조종을 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음. 이는 저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음. 지금까지 이 어려운 대한민국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로서 떳떳하고 바르게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있음.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직원들, 구독자들에게 떳떳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게 시세조종 의도가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고 제 매매기법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음. 하지만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기존의 매매기법을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도 전혀 없음. 저는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진심으로 투명하고 바르다고 믿음. 그리고 제가 이런 길을 걷는 이유는 제 명예, 무엇보다도 자부심과 관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의혹과 오해를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바른 길을 걷겠다는 저의 각오를 꼭 말씀드리고 싶음. 부디, 깊이 있게 판단해 주시고 이번 사건을 통하여 발생한 모

든 오해와 편견을 없애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4년여 기간 중에 87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씨가 이 87일 외에도 거래가 많이 있었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니까 그 날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래였던 것인지 아니면 시세조종이라는 혐의에 다다르지 않는 그냥 그런 거래였던 것인지, 아니면 시장질서교란 수준은 되는 것인지 궁금함. 기본적으로 다른 날에는 거래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궁금함.

- (보고자) 사실 굉장히 많은 거래일임. 그리고 많은 거래일 모두 매매양태는 거의 동일한 내용임. 다만, 저희가 기준을 설정했음. 엄밀히 보면 나머지 일자들도 다 시세조종으로 조치 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좁히고 좁혀서 거래일수와 종목을 선정한 것임.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그러면 선매수를 한 날 중에 전량매도를 한 날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것의 교집합을 보신 것인데, 거기에 다른 조건 추가해서, 그런데 선매수를 한 날 중에 전량매도를 한 날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 (보고자) 대부분이 바로 전량매도함. 한 30분에서 40분이 걸림. 선매수부터 단주치고 전량 팔아내는 것까지 한 30~40분 정

도로 끝남. 대부분의 종목에서 다 털어냈음. 그런데 왜 87일만
선정이 됐느냐, 사실은 다른 조건들에서 많이 탈락이 된 것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 의결안건 제168호 『비엔케이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비엔케이자산운용(주)에서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 ○○임. 우선, 당사는 좀 더 사려 깊은 업무
수행을 통하여 어떠한 절차적 과실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함. 당사는 손실보전 회피 목적을 가지고 대출채권
양도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음. 거래 당사자들과 투자자들
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보전할 손실이 없었음에도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손실보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서야 당사는
이번 거래가 손실보전 회피 목적 거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음. 당사는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하였음. 실제로 거래 당시 또는 거래 후에도 해당 대출채권이 손실이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기에 본 건 거래가 손실보전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만약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

- ▶ (진술인) 비엔케이자산운용(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 <<< 변호사임. 준법감시인의 진술에 이어서 비엔케이자산운용(주)이 지적 받은 손실보전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소명 드림. 조치원인사실에 대한 의견으로 6면에서 본 건 거래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음으로 검사국은 본 건 대출채권을 상각 평가한 이상 대출채권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가격에 처분한 것이 손실보전이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상황에 비추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대출채권을 정상 매각할 기회가 있다면 그래야 하는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에 따라 당사는 대출채권을 정상가격에 매수하여 누구도 손실을 입히지 않는 거래를 하였음. 앞서 말씀드린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최고한도수준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당사는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에 기초하여 최선의 거래방안을 모색한 것인데 이를 손실보전행위 위반의 고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시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함. 검사국은 본 건이 언론에 공표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고 금융기관의 기본적

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반결과가 ‘중대’하다고 하고 있으나 언론에는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없는 점을 들어 위반결과는 ‘경미’로 감경을 고려해주시기 바랍.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등의 조치로 과태료부과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자 모두 손실이 발생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부과 면제 규정에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상각된 금액이 해당 채권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실제 가격과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했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채권 만기가 도래하였고 그 채권이 지금 예정된 만기에서 당시에 상환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펀드운용지침에 따라 그러한 상각기준에 따라 상각한 것이고 그것이 시장에서 그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임.

○ (위원) 수익자들은 ㅁㅁㅁㅁㅁㅁ에 있는 고객 중에서 굉장히 우량한 고객들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일반투자자들이었는지?

▶ (진술인) 고객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저희가 판매사가 아니어서 고객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개인고객으로만 보고를 받았음.

○ (위원) 상식적으로 이 정도까지의 노력을 해서 뭔가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면 나름 수익자와 투자자들을 우대했다고 보임. 이 투자처였던 ▼▼▼▼ 업체에 아마 ㅎㅎㅎㅎ ㅎㅎ가 근무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 (진술인) 맞음. 제가 그 펀드가 있을 당시에는 몰랐고 검사 때에 그 사실을 들었음.

○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개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점검(check)하는 내부통제절차라든지, 이해상충 방지장치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지? 그러한 것이 가동되지 않았는지?

▶ (진술인)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음. 펀드 설정할 당시 ㅎㅎㅎㅎ ㅎㅎ은 이 ▼▼ 거래와 관련이 없었고 그 회사에 있었던 사실 조차도 관련자들은 펀드 설정 이후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음. 설령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이해상충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하면 되는 것임.

○ (위원) 저는 자본시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투자실적에 따른 실적배당 원칙이라고 생각을 함. 물론 동 건에 있어서는 정말 손실보전을 해 준 것인지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최근에 비슷한 사례와 관련해서 금감원이 다른 사안에 있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실보전금지 이 부분에 있어서 준법감시인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음.

- ▶ (진술인) 저는 이 사건 자체가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 ㉮㉮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 거래를 하면서 당연히 운용사는 투자자보호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법률위반이 없어야 하고 이해상충이 없어야 함.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한 거래이기 때문에 본 제재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저는 질문은 없고, 저희는 지금 자산운용에 대해 제재를 하지만 ㉮㉮㉮에 대해서도 혹시 위규행위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보고자) ㉮㉮㉮㉮㉮㉮, ㉮㉮㉮㉮㉮㉮㉮, 비엔케이자산운용 세 곳을 한꺼번에 검사나간 바가 있음. 그래서 ㉮㉮㉮㉮㉮㉮에 대해서는 경영진 건으로 두 가지를 제재한 바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 ㉮㉮에 대해서는 동 대출채권 관련된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연관성을 찾지 못했음. 그리고 ㉮㉮㉮㉮㉮㉮㉮에 대해서는 계열사 신용공여 보호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 1,800만 원이 이미 부과된 바 있음.
- (보고자) 금융위에 같이 올라갈 예정임.

○ (위원) 확인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각된 채권이 처음에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상환이 안 되었다가 결국에는 상환되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는 저희 지침에 따라서 부도 발생 채권으로 분류하면서 14억원 상각을 했음. 이것이 발생한 것은 2019년 7월에 만기가 도래했던 것인데 매각은 2020년 8월에 매각되었음. 그 이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한 12~13개월간에 걸쳐서 조금 조금씩 상환되기 시작하여 결론적으로는 다 상환되기는 했음.

○ (위원) 그렇다면 옵션이라는 것이 전혀 행사가 안 되었던 것인지?

- (보고자) 안 되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 한 2% 정도 되는 이득을 보면서 거래가 종료되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69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다른 의견은 없고, ☆☆☆씨는 2021년 3월25일 당시에 前대표이사였는지?

- (보고자) 아님. 그 당시에는 대표이사였고 현재 기준으로 前 대표이사임.
- (위원) 오히려 오인할 수 있으니까 ‘前’을 빼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음. 왜냐하면 시기가 그때로 특정을 해주셨음.
- (위원) 저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한국거래소에서 할 때 이 당시에 세 지점 관여율, 다섯 지점 관여율이 높아서 한국거래소에서 처음 인지가 되었던 것 같음. 제 질문은 이분 말고 다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하는 것임. 이분만의 거래로는 그렇게 높은 관여율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음.
- (보고자) 한국거래소에서 온 다른 혐의자도 있었는데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정황이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무혐의 했음.
-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분 미등기이사로 이사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사람인지?
- (보고자) 맞음.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음.
-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미등기임원도 그 대상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0호 『(주)퀀트인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1호 『(주)바이셀스탠다드 등 2개 조각투자업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2호 『(주)지아이이노베이션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 회사 경위를 보니까 신기술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으면서 위반하게 된 것 같은데, 회사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정황이 있었는지?

- (보고자) 2006년부터 저희 기업공시 실무안내 등에서 투자자의 수를 산정할 때 조합원 각각에 대해서 1인으로 산정한다는 부분을 계속 안내 해오고 있었음.

○ (위원) 당시에 투자조합에 대한 업계의 오인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니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양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장) 제172호 안건은 당시 (투자조합에 대한) 업계의 오인이 있었다는 점,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30% 감경해 과징금을 1억 74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73호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부터 의결안건 제174호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주), LG화학(주)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까지 이상 2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제173호 안건 관련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Rockefeller & Co.,INC는 2021년 5월11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통주 4,530주 및 우선주 2,186주에 대한 주문이 공매도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과징금 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람. 먼저, 금감원에서는 과징금 산정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통주 4,530주와 우선주 2,186주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삼으셨음. 하지만 Rockefeller & Co.,INC에서 보유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중개인(broker)의 개인용 계좌에 대한 결제불능으로 인해 기관용 계좌로 주문을 정정한 주식은 보통주 2,240주, 우선주 2,052주임. 따라서 공매도 발생에 따른 과징금 산정시 실제 문제가 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록 개인용 IRC로 주문하였다가 기관용 IRC로 주문을 정정하여 결과적으로 일시적 공매도가 발생하였으나 본 사안은 Rockefeller & Co.,INC 및 그 고객들이 본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개인용 IRC를 취급할 수 없는 중개인(broker)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한 사안임. 따라서 처음부터 공매도를 의도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다음으로 Rockefeller & Co.,INC는 본 사안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었으며 발생한 공매도의 결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Rockefeller & Co.,INC는 본 공매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장내에서의 매수를 통해

공매도한 주식을 결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Rockefeller & Co.,INC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거래하기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공매도 거래를 한 바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그럴 의향이 없음. 또한,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Rockefeller & Co.,INC는 지난 30년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한국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람. 당국에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본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이 없을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은 저희의 의견을 고려하시어 Rockefeller & Co.,INC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외국인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주문하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이것이 원인을 알 수 없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원인이 확인됐는지?

▶ (진술인) 그 부분은 저희도 본 사안 수임하면서부터 계속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었음. 의심스러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음.

○ (위원) 그러면 같은 오류가 또 반복되는 것 아닌지?

▶ (진술인) 저희가 이 사안을 발견한 다음에는 해당 조치를

시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자신할 수 있음.

○ (위원) 새로운 ▷▷▷시스템을 언제 도입하신 것인지?

▶ (진술인) 2021년 당시에 쓰고 있었던 트레이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 있었음. 그해 말 정도에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어서 실행되었고 현재도 새로운 트레이딩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있음. 제가 이 부
분과 관련해서 고객께 여쭙봤던 것이 원래 이렇게 2~3년
주기로 계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바꾸느냐고 질
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쓰고 있던 시스
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었는데 해당 시스템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원래
다시 쓰고 있었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들었음.

○ (위원) 경고시스템이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
되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경고시스템의 활성화, 비활성화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사람이 조작(click) 하는 것인지?

▶ (진술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임의로 조작할 수도 있음.
원래 기본적으로는 설정(setting)이 켜져(on)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IRC가 잘못 지정되는 경우에
는 경고시스템이 뜨도록 설계되어 있음.

○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의 실수로 경고시스템이 비활

성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실수는 어떤 실수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인지?

- ▶ (진술인)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유추해 보았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듣기로는 1,000가지가 넘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함.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일부를 비활성화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두 번째로 의심스러운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들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음. 그래서 Rockefeller & Co.,INC에서도 이런 사안 때문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활성화시스템이 잘못 건드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 제173호 안건 관련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내부통제절차는 갖추고 있었고, 이례적인 오류로 보이므로 저는 ‘과실’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 (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낸 것도 아님. 이것이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처음에 주문이 나갈 때는 그런 것으로 보임. 기관은 기관대로 자기들이 보유한 것에 대해서 매도를 한 것이고 개인은 자기들이 보유한 것에 대해서 매도

를 한 것인데 들어간 외국인 전용계좌를 잘못 사용해서 사후적으로 Rockefeller & Co.,INC 기관 입장에서 자기가 보유하지 않은 것을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일반적인 공매도 주문과는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감경의 여지가 아주 많은 것 같다고 생각됨.

- (위원장) 제173호 안건은 Rockefeller & Co.,INC가 내부통제 시스템은 구비되어 있으나 불상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안과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보고 과징금을 2억 9,01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그리고 제174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의결 제173호는 수정의결하고, 의결 제174호는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의결 제173호는 수정의결, 의결 제174호는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5호 『(주)티에스이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6호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검사제재 과정에서 제척기간 도과 사실이 여러 가지
주의소홀로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촉구 드림.

- (보고자) 유념하겠습니다.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77호 『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전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